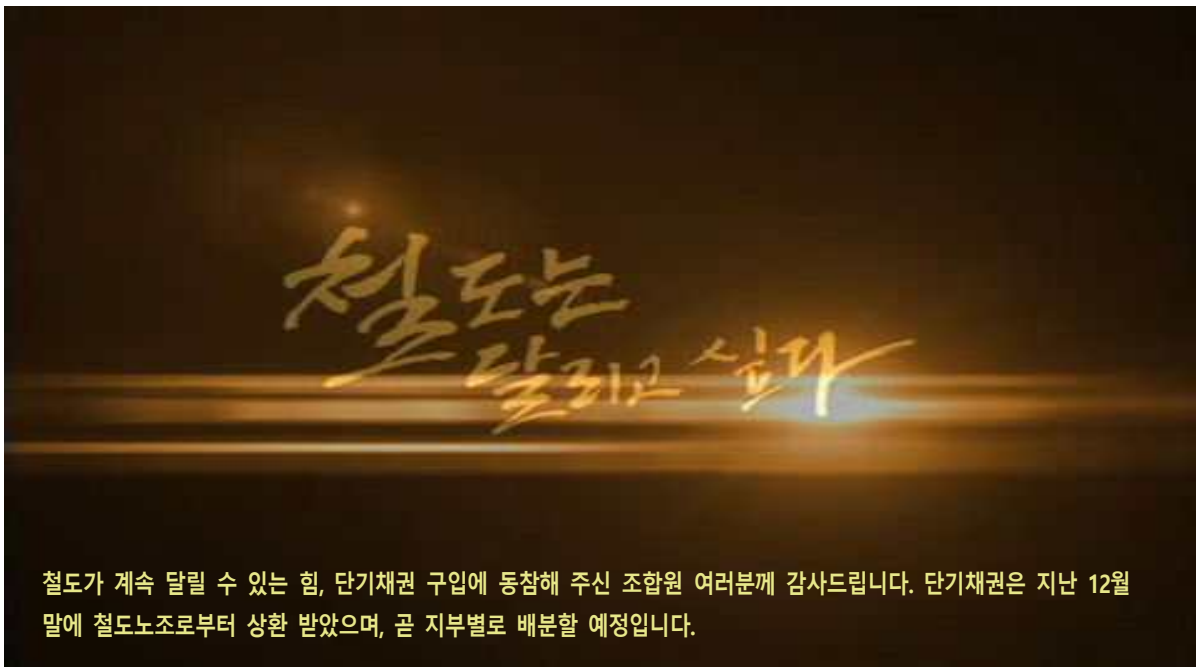
발전노동자 235호 2017.01.05
키우자, 전력산업 공공성 / 만들자, 좋은 일자리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KOREA POWER PLANT INDUSTRY UNION

올해부터 발전 5개사, 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 순차 상장

올해 상반기 남동, 동서발전 중 1개사를 먼저 상장한 뒤 나머지 한 곳을 하반기에 상장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8일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계획을 보고했다. 발전 5개사를 우선상장대상 그룹으로 선정해 2019년까지 상장하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0년까지 상장을 추진한다. 상장 방식은 혼합소유제로 최대 30%를 상장하고 정부가 최소 51% 이상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이에 남동, 동서발전이 다음 주 기업공개(IPO) 주관사를 선정하고 상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상장 스케줄에 따르면 남동, 동서발전은 이달 두 번째 주까지 대표주관사 선정을 완료해야 하며, 3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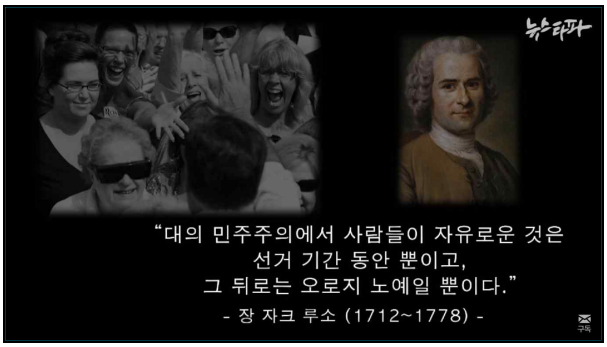
발전공기업 상장이익, 누구에게 돌아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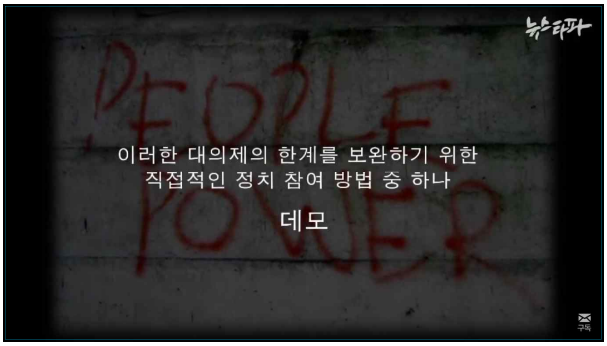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투명성 확보,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한다고 한다. 이쯤에서 상장 목적에 대한 의문에 대해 짚어보자. ① 투명성 확보?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LIO)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상장기업의 정보공개시스템인 전자공시시스템(DART)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된다. ② 자율적 감시·감독? 이는 이미 상장된 공공기관의 감시·감독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33% 이상의 주식이 상장된 한전기술에서 발생된 원전비리, 40%의 주식이 상장된 한전산업개발 부사장의 배임과 횡령, 48%의 주식이 상장된 한전KPS의 퇴직자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과 같은 일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③ 재무구조 개선? MB정권의 해외자원개발 독려, 원자력 및 석탄화력 확대 정책으로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부채는 급격히 증가되었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지속적 하락, 전기요금 인상으로 최근에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2015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10조원, 6개 발전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4조 2천억원이었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공기업의 주식 20%를 상장할 경우 약 8조원의 자금이 한전으로 유입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발전공기업의 순이익은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유출되어 오히려 발전공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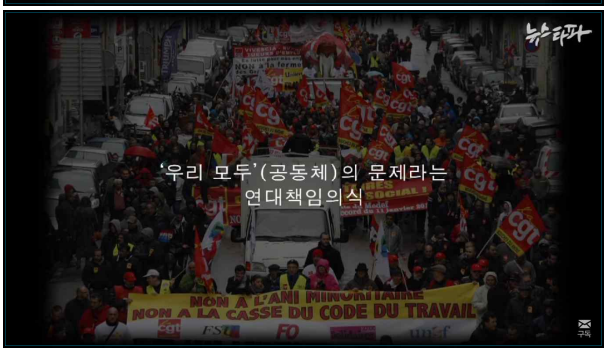


철도가 계속 달릴 수 있는 힘, 단기채권 구입에 동참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기채권은 지난 12월 말에 철도노조로부터 상환 받았으며, 곧 지부별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데모와 연대책임의식







'보통 선거'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는 애초부터 '불완전한' 제도인 셈이다. 우리의 세금을 거두어 쓰며 지배하는 이들을 통제하기에 지금의 대의제는 너무나 취약하다.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만들 방법과 수단을 찾아내야 한다.

보다 강력한 방법과 수단. 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데모'다. 데모는 대의 민주주의라는 불완전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본질적 의미를 지닌다. 물론 여전히 많은 이들은 데모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데모를 한다고 해서 과연 세상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도 있고, 혹은 데모가 그저 떼쓰기일 뿐이라고 폄하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데모가 어떠한 형식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다. 다름 아닌 '과로사'가 그것이다. 과거 일본에서는 한 청년이 신문 보급소에서 일하다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처음에 유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했는데, 당연히 개별적인 소송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을 겪은 다른 유족들이 함께 모여 데모를 하자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우선 이 사건을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가 다름 아닌 '과로사'다. 지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지만 그때만 해도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였다.

언론의 보도를 접한 일본인들은 '과로사'라는 개념을 통해 이것이 단순히 신문보급소에서 일하다 죽은 특정한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로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개념임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과로사'는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게 되고, 정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사회 구성원 '일부의 문제'가 데모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데모는 단순히 정치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발현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한 셈이다.

공동체 의식. 이를 프랑스에서는 '솔리다리테'라고 부른다. '연대책임의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는 단순히 '너의 문제'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개념이다.

'데모'는 그저 몸부림을 치거나 떼를 쓰기 위함이 아닌 매우 중요한 '직접 민주주의적' 참여 방식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연대책임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연대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란 구성원들이 처한 모든 문제를 오로지 구성원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이자, 심지어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도 구성원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매우 암울한 사회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출처 : 뉴스타파 미니다큐 5minutes '주인의 자격'>

끝